중국경제:

중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점검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현 상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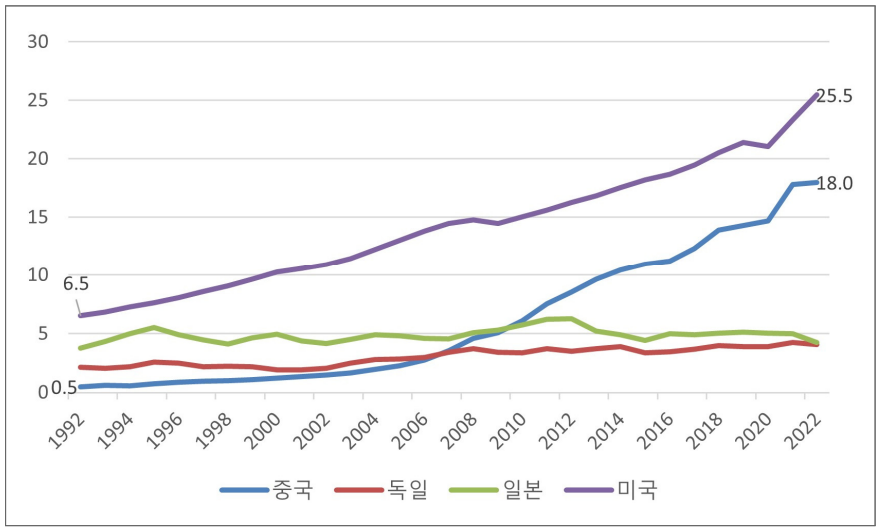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Ⅰ. 중국경제 고속 성장과 구조적 모순 축적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지난 40년 간(1979~2018) 연 평균 9.5%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 두 자릿수의 고속 성장 시대를 맞이했다. 중국 GDP 규모는 2007년 독일을, 2010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G2 국가로 성장하였다. 1992년 중국의 명목 GDP 규모는 4920억 달러로 미국의 7.5%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17조 9806억 달러로 미국의 70.6%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그림 1〉 주요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GDP(명목) 규모 비교

(단위: 조 달러)



자료 :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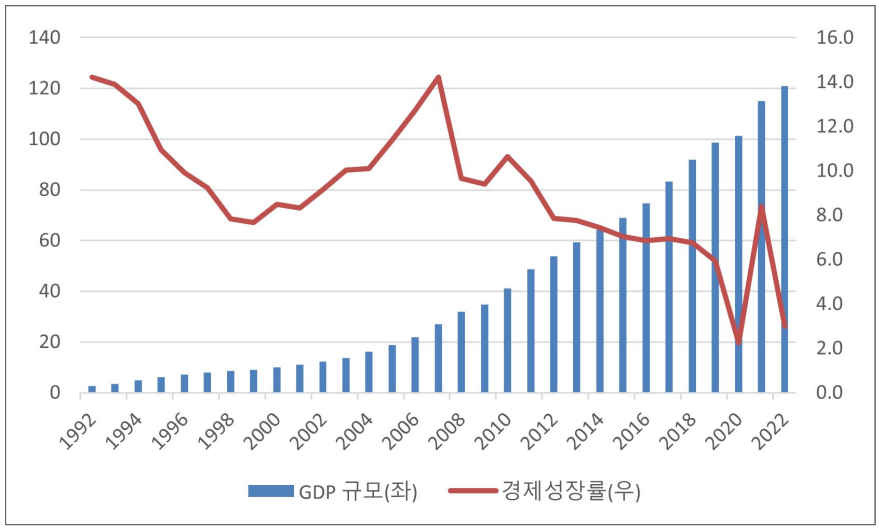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여 단기 충격에 대해 빠른 대응을 하여 중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축적되었던 부동산, 국유기업, 부채 등 구조적인 모순이 더욱 심화되었다.

2011년부터 경제성장이 한 자리수로 하락하였고, 2012년에는 8% 아래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는 중속성장 시대를 의미하는 '신창타이'(뉴노멀)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급측 구조개혁, 투자·수출에서 내수 위주로의 성장방식 전환, 노동·자본의 투입형 성장에서 혁신 주도의 성장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후 중국경제는 미중 전략 경쟁 시대라는 새로운 변곡점에 진입했다. 2018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 통제를 시작으로 기술, 공급망, 군사, 금융 등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첨단 기술과 공급망 견제는 중국 경제 성장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중국 경제의 새로운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또한 중국 내부적으로도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장기 어젠더를 셋팅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공동부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견제, 사이버 안보 강화와 데이터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2023년 3월 양회(兩會) 이후 출범한 시진핑 3기 신지도부 출범은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에게는 코로나19 시기의 중국 방역당국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중심의 동맹국과 중국-러시아 간 신냉전적인 지정학적 구도로 발전되고 있어 중국경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림 2〉 1992년 이후 중국 GDP 규모와 경제성장률

(단위: 조 위안(좌), %(우))



자료 : CEIC.

앞서 언급한 중국 경제의 내부적인 구조적 요인과 미중 갈등, 러우 전쟁, 중국내 정책 불확실성, 코로나19 팬데믹 등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중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하고 있다.

Ⅱ. 중국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리스크 요인

2012년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중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더해지면서 중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중국경제에 대한 대표적인 부정적인 견해로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이 있다. 중진국 함정은 세계은행이 2006년 아시아경제발전보고서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과거 저소득국 국가가

중소득국가로 성장한 이후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고소득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저소득국가로 전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1960년에 중진국이었던 101개 국가 중 2008년까지 고소득국가로 발전한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13개 국가뿐이고, 나머지는 50년 간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더 가난해졌다고 분석했다(The Economist, 2017.10.5.). 고소득국가, 중진국에 대한 정의는 학자와 기관별로 상이하지만, 이들 국가가 고소득국으로 발전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노동, 자본, 기술(총요소) 등 생산성 저하, 산업 고도화 및 기술 혁신 부족, 소득 격차 확대 등을 중장기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중장기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고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1. 중장기 리스크 요인 1: 생산성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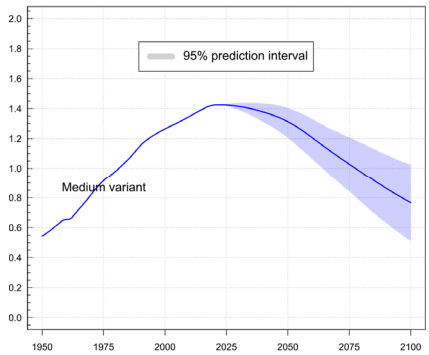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어떻게 생산성을 제고하느냐가 시대적 화두이지 국가발전 목표였는데 최근들어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 투자 효율 하락에 따른 자본 생산성 저하, 기술 혁신 및 제도 개혁 미흡에 따른 총요소 생산성 저하 등 기존 성장 방식의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산성 저하는 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우선 중국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살펴보자.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은 2010년대 초반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2015년 이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절대수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가장 권위있는 인구학자인 차이팡(蔡昉)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 노동시장이 초과수요에서 초과공급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가 중국 경제성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현상백 외, 2018: 41).

UN DESA에 의하면 중국 인구는 2022년 14억 26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100년 이전에 10억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UTERS, 2023.4.25.).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제수준이 선진국에 도달한 이후에 고령화 문제가 발생한 반면, 중국은 부유해지기도 전에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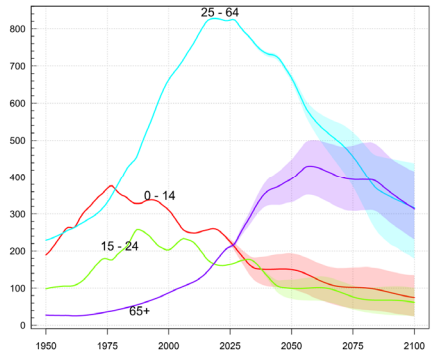
〈그림 3〉 중국 총인구 전망

(단위: 백만 명)



〈그림 4〉 중국 연령대별 인구 전망

(단위: 백만 명)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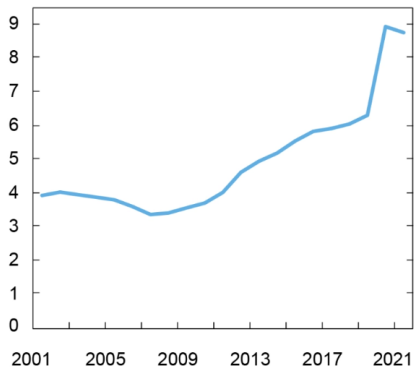
중국 자본의 투자 효율도 악화되고 있는데, 중국의 한계고정자본계수(ICOR)[1]는 2008년을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의 충격에 대응하면서 대규모 정책자금이 인프라, 부동산, 국유기업 등 비효율적인 분야로 투입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볼

1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는 산출을 한 단위 늘리는 데 필요한 자본의 단위로, ICOR이 높을수록 투자의 비효율성이 커져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함.

수 있다. 즉 자본 배분에 있어 시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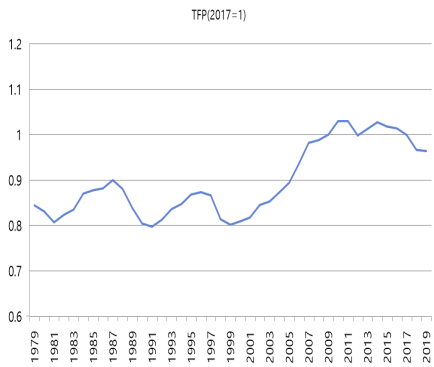
중국의 총요소생산성(TFP)도 개혁개방 이후 상승곡선을 보이다가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및 자본 이외 기술 혁신, 제도 개혁 등 모든 다른 생산성 증대 요인을 포함한 개념이다. 미국 Fed(FRED)에서 추산한 중국의 TFP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중국경제가 2012년 전후 중속 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유기업 개혁 부진, 전통산업 생산과잉, 지방정부 부채 증가, 기술 혁신 미흡 등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쌓이면서 야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5〉
중국의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자료 : Hunter Clark and Jeff Dawson. 2022.9.26.

〈그림 6〉
중국의 총요소생산성(TFP, 20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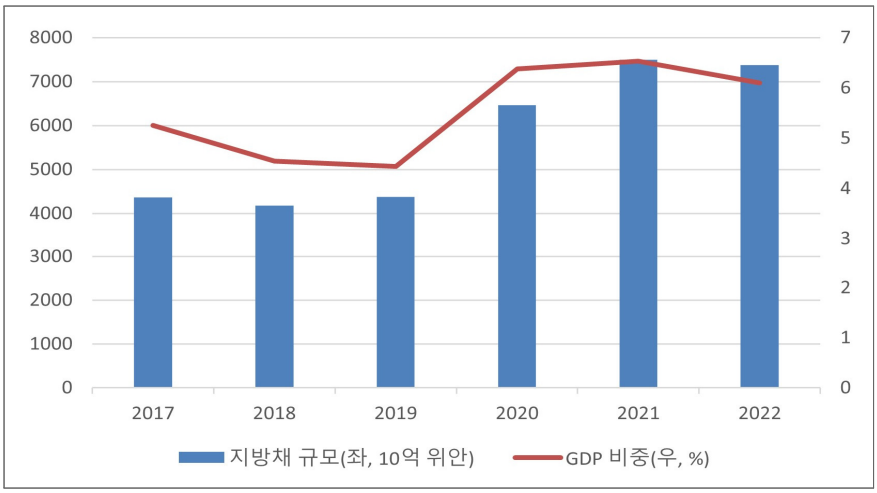
자료 : FRED.

2. 중장기 리스크 요인 2: 부동산 리스크와 지방 부채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리스크가 중국 중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개혁개방 이후 40년 간 중국의 도시화,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 부동산은 중국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자산가격 거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가면서 과열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2015년 전후 중국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규제 강화로 전환되고 2021년 불거진 헝다(恒大) 사태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부동산 시장이 한계에 이르렀고 부동산 시장 침체, 더 나아가 거품 붕괴로 인해 중국 경제도 일본이 겪었던 장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금융권 및 가계 부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 세수입이 주요 수입원이었던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져 재정위기로 확대될 수 있어 중국의 장기 성장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산하의 투융자플랫폼(LGFV)을 통해 부채를 늘려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밖에 없어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정부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 지방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LGFV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7〉 중국 지방채권 발행 규모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CEIC.

3. 중장기 리스크 요인 3: 소득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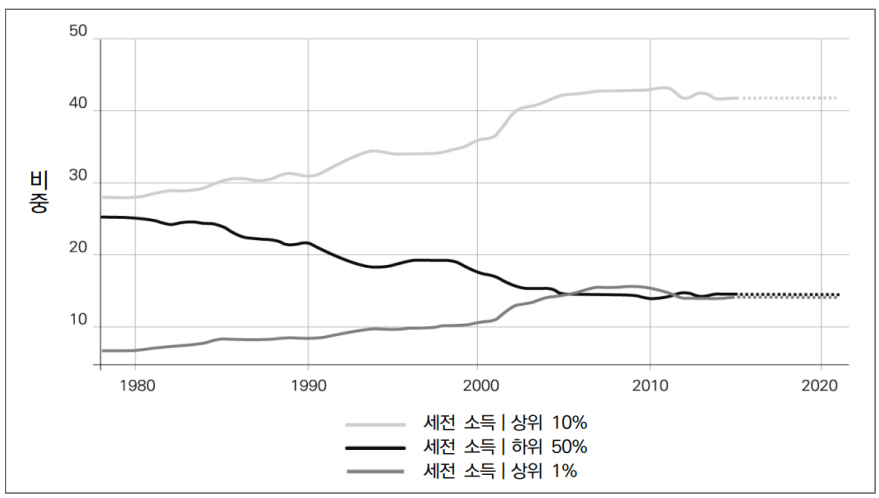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중국 내 소득 격차의 확대이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18년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경험하면서 중국은 중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내수 시장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08년 이후 중국은 투자,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 구조에서 소비 위주로 전환하고자 하였고, 미중 갈등 본격화된 2018년 이후에는 거대한 내수 시장에 기반한 국내대순환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육성하여 글로벌 공장에서 글로벌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수 주도의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비 여력이 큰 거대한 중산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 생산성 제고, 효율성 제고를 경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

배분, 형평성과 관련된 정책 추진은 미흡하였다. 2021년 중국이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포하면서 중국내 빈곤층이 소멸되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중국정부가 설정한 절대적 빈곤을 해결한 것이지 중국 내 소득 격차, 도농 격차, 지역 격차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 빈곤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008년 중국 지니계수는 0.491을 최고점으로 2019년 0.465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인 0.5에 근접한 위험한 수준이다. World Bank의 WID(World Inequality Database)에 의하면 중국 내 소득 상위 1%, 상위 10%, 하위 5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9년 6.5%, 27.8%, 25.1%에서 2021년 15.7%, 43.4%, 13.7%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중국 내 소득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면 중국의 중장기 성장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 중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림 8〉 중국 소득 불평등 추이: 상위 1%, 상위 10%, 하위 50% 비교

(단위: %)



자료 : 연원호 외. 2021: 54 인용; WID.

Ⅲ.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

중국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은 2021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선포하면서 2050년까지 다음 단계의 국가 발전 목표로 공동부유를 제시하였다. 이는 덩샤오핑이 제시한 선부론 시대를 마감하고 다 같이 잘사는 공부론 시대로 전환되는 중국경제 발전 방향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 발전의 장기 패러다임 전환은 위에 언급한 중장기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빈부 격차, 저출산 고령화,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등을 새로운 체제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성장 관련하여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 경제 규모를 2021년의 두 배로 성장시키겠다는 미래 15년간의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15년 간 연평균 4.7%의 성장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5년)에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 국내 경제가 자체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여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이다. 쌍순환 전략에는 국내대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 정책, 내수 시장 확대 정책, 산업 고도화 정책, 과학기술 자주 개발 정책, 소득분배 정책, 대외 협력 정책 등 모든 경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쌍순환 정책의 핵심적 맥락은 여전히 생산성 제고에 있다. 노동 생산성 저하 문제는 양적 투입이 아닌 고급 인재 육성을 통해 질적 제고로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자본 생산성 저하는 국유기업 개혁, 금융 개혁, 자본시장 개방 등을 통해 대응하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 40년간 추진해오던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에 의한 성장이 아닌 기술 개발과 제도 개혁을 통한 총요소 생산성 제고에 의

한 성장으로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기존 전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민간기업과 외자기업 주도로 첨단 제조업,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주택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집약되어 있다. 이는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을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0년 간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자산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빈부 격차를 야기하고 중국 경제가 필요한 실물 부문, 예컨대 핵심 산업과 기술 부문으로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병폐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중국 청년들의 결혼, 출산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중국의 중장기 성장 목표 달성에 있어 부동산 주도의 경제성장 방식을 탈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발생한 헝다 사태와 코로나19 시기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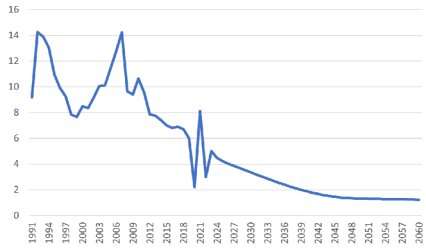
소득 격차와 관련하여서는 공동부유 기조하에 소득 분배제도 개선과 농촌 발전을 통해 상대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가 공동부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는 2021년 5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지정한 '중국 저장(浙江)성 공동부유 시범구' 진행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저장성에서 제시한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의 주요 지표와 목표 중에 기존의 전면적 샤오캉 사회와 비교하여 특징적인 점은 가구당 연소득 10~50만 위안 비중, 20~60만 위안 비중과 같은 중등소득층 비중과 노동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전면적 샤오캉 사회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소득분배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소득분배 개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로 귀결된다. 기술 혁신과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총요소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노동의 양적 투입이 아닌 질적 제고를 통해 인적 자본 투입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국유기업, 부동산 위주의 성장 방식이 아닌 민영기업, 신산업 위주의 성장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소득, 지역, 도농 격차 해소를 통해 거대한 중산층을 육성하여 글로벌 소비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중장기 성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중 전략 경쟁,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지도 중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Ⅳ. 결론: 중국 중장기 성장 전망과 한국에의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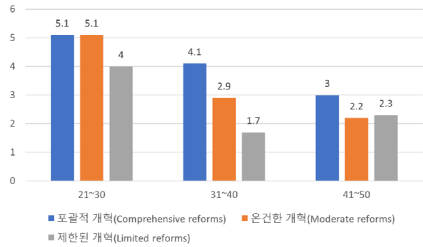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은 분석 방법과 설정한 가정에 따라 다양한 전망치가 제시된다. OECD는 14차 5개년(2021-2025), 15차 5개년(2026-30), 16차 5개년(2031-35) 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4.96%, 3.69%, 2.86% 성장률을 전망했다. 2039년 이후 2060년까지 1%대의 성장률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과 World Bank가 공동으로 연구한 전망치에 따르면, 중국 개혁 범위와 수준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2021~30년 연평균 5.1%, 2031~40년 연평균 4.1%, 2041~50년 연평균 3% 성장률을 전망했다. 반면에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개혁이 더디고 제한적일 경우 각각 4%, 1.7%, 2.3%로 전망하였다.

〈그림 9〉 OECD의 중국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



자료 : OECD Data.

〈그림 10〉 DRC와 WB의 시나리오별 중국 경제 전망



자료 : World Bank Group & DRC. 2019: 25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중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따라 한국산 제품이 대체되고 있어 중국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탈중국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의 제조업과 공급망 협력은 양국 경제 산업 협력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중국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한중 제조업 협력도 첨단 분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 내수 확대에 따라 소비재와 서비스업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정부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흥 시장이 생기면서 새로운 한중 협력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이에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대해 앞서 언급한 중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인 인구구조 문제, 과학기술 혁신 가능여부, 소득 격차 해소 여부 등을 중요 변수로 하는 시나리오별 전망과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경제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중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 높아진 중국 시장의 수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 경제도 이에 뒤처지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중 경제 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한중 양국의 새로운 동적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CEIC, https://www.ceicdata.com/ko.
FRED. Total Factor Productivity at Constant National Prices for China, https://fred.stlouisfed.org/series/RTFPNACNA632NRUG.
OECD Data, https://data.oecd.org/gdp/real-gdp-long-term-forecast.htm.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https://population.un.org/wpp/.
World Bank. WID, https://wid.world/.

Hunter Clark and Jeff Dawson. 2022.9.26., 『Is China Running Out of Policy Space to Navigate Future Economic Challenges?』 Liberty Street Economics. https://libertystreeteconomics.newyorkfed.org/2022/09/is-china-running-out-of-policy-space-to-navigate-future-economic-challenges/.
REUTERS. 2023.4.25., 『India to surpass China as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in April, UN says』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surpass-china-worlds-most-populous-country-april-un-says-2023-04-24/.
The Economist. 2017.10.5., 『The middle-income trap has little evidence going for it』 https://www.economist.com/special-report/2017/10/05/the-middle-income-trap-has-little-evidence-going-for-it.
World Bank Group & DRC. 2019, 『Innovative China: New Drivers of Growth』
연원호·현상백·구경현·노윤재·윤정환·이효진. 2021, "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KIEP 연구보고서』, 21-14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상백·박민숙·박진희·조고운·김부용. 2018,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과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18-16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